

# ‘한전공대법’ 오늘 마지막 고비… 법사위 심의 진통 예고

### 부영골프장 잔여지 아파트 건립 쟁점 통과해야 24일 본회의 상정 ‘개발이익 환수’ 수용 관건

한전공대의 원활한 개교를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의 국회 통과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부영 특혜 논란에 대한 전남도·나주시의 개발이익 환수 입장을 담은 ‘연대 서명’이 힘을 발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전공대 부지 기부자인 부영이 진행하는 개발사업이 특혜 논란을 빚으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

세고, 최근 ‘LH법’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 여당 내에서도 한전공대법의 재보결선거 이전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영 개발행위에 따른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남도·나주시의 연대 서명을 야당에서 수용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한전공대법에 대한 법안 심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어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와 함께 한전공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는 부영의 개발 행

위에 대한 여당 내 시선도 곱지 않다. 부영이 한전공대 캠퍼스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나주혁신도시 내 체육시설 부지인 ‘부영골프장’ 잔여지를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특혜를 주장하고 있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골프장 잔여 부지에 최고 28층 규모 5383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부영 특혜 논란을 야당이 이사회화한다면 민주당도 법사위에서의 강행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한 국회의원은 “한전공대의 개교를 위한 법안인데 특정 기업의 개발 행위에 따른 지적이 불

거지면서 법안의 목적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는 22일 야당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한전공대특별법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부영의 아파트 건축에 있어 개발이익 환수제를 최대한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에 연대 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는 지가 상승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파트 건설 및 분양에 따른 막대한 이익 환수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법안 처리 과정의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 체제에서 교사(校舍·학교 건물) 준공 지연에 따라 학교 설립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한전공대법의 조속한 제정이 선결과제였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한전공대 측은 5월 3일 이전까지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과 캠퍼스 착공에 나서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공직자 투기 근절 TF 회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당대표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수용

### “재지휘 않겠다” 입장 발표…檢 수사관행 합동 감찰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한 대검 확대회의의 결정과 관련해 “재지휘를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의 공소시효는 이날 밤 12시로 끝나는 만큼 해당 재소자와 위증교사 의혹을 받은 당시 수사팀은 사법적 판단을 피하게 됐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 나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박 장관이 대검 결정을 두고 추가 수사지휘를 하진 않겠다고 전했다. 장관이 예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대검의 결론을 뒤집겠다”는 게 아니라 대검이 이날 초 무혐의 결론을 내는 과정에 “절차적 정의를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날 밤 12시로 끝나는 만큼 현실적으로도 재지휘를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사실상

대검의 결정을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대검 확대 회의가 자신의 수사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불만을 터뜨렸다.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며 수사지휘를 했는데 지시에 따라 열린 회의마저 절차적 정의를 의심받는 일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지시도 없었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의혹의 당사자인 한명숙 수사 검사를 회의에 불려 의견을 듣고, 비공개에 부치기로 했던 회의 결과를 누군가 특정 언론에 유출까지 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강도 높은 합동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합동감찰 대상에는 과거 한 전 총리 수사 과정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제기된 위증교사 의혹 처리 과정과 확대 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경위도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의 취지가 검찰 부패정권 수사 관행을 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 與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동의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22일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공문을 통해 “전수조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2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각 국회의원실에 요청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리감찰단의 활동상황과 관련해 “깊이 있는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25일 예정된 공직자 재산등록 때가 되면 조사들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찰단은 지난 8일부터 소속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및 그 가족의 3기 신고서 보유 현황을 신고받았다. 감찰단은 그간 언론에 의혹이 보도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김원이 “오세훈, 내국동 보금자리주택 정책 개입 확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22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셀프보상’ 해명의 거짓말 증거를 제시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때인 200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그 상태,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오 후보가 적극 개입하고 국토부와 협의했음을 드러내는 발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 2009년 10월 16일 서울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발췌해 소개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김효수 당시 주택국장은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산자락에, 산속에 어떻게 성남갑 같은 아파트만 계속 지을 수 있느냐,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가는 데는 그린 구름지나 이런 데는 성남갑 같은 아파트는 배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적이면 테라스나 중정형이나 이런 친환경적인,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는 오세훈 당시 시장의 발언을 소개한 뒤 “이러서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 지역정가

### 정무창 시의원 ‘디지털성범죄 방지 조례안’ 심의 통과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2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시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 지원, 전담조직



등 추진기관 설치·운영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교육도 하도록 규정했다.

### 최영환 시의원, 청년기업 육성·지원 조례 발의

광주 지역 청년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최영환(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광주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청년기업 육성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



지원 우대, 수의·공공 계약 참여시 우대 등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시가 물품을 구매할 경우 청년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우수 기업은 포상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최원일 기자 cki@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싼”  
“땡”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 가능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확정
- ▶ 매매 - 21억원, 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

“금”  
“매”

-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20층 중 8층, 사무실 전용
- ▶ 계약 108㎡, 전용면적 67㎡
- ▶ 코너, 전망 좋음, 주차 편리
- ▶ 매매가격 4억원 → 7,500만원
- ▶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6837-4700